

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시험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해설 : 송 광 호

(일비스신광은경찰학원 해양경찰학개론 전임)

◆ 문제 분석표 ◆(참고 : 상 중 하는 난이도, 조는 조문문제, 판은 판례)

구분	문제수	목차	세부문제수	박스형개수문제	특징
총론	7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1. 총론 : 각론 = 7 : 13 2. 전체적인 난이도 : 중상급 3. 조문문제 : 18문제 4. 수사론 : 2문제(이론 문제) 5. 기출문제가 자주 나오는 주변 조문을 조심할 것. 6.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 출제가 다수됨.
		한국해양경찰사	[1] 해양경찰 현장_상 조		
		외국의 해양경찰			
		해양경찰조직법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_중 조 [9] 해양경찰법 중 해양경찰의 직무_중 조 [11] 해양경찰법 중 해양경찰위원회_하 조	[2] [9]	
		해양경찰공무원			
		해양경찰작업법	[3]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_중 조 [4] 해양경비법_중 조 [13] 해양경비법 중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_중 조	[3]	
		관리론			
		통제론			
각론	13	범죄예방론	[6]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_중 조 [15]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_중 조		공부방법 조언 7. 요약집만으로 간단히 고득점 받으려고 하지 말라. 8. 조문을 철저히 숙지할 것. 9. 기출문제 공부하는 기본이다. 10. 기출문제가 자주 나오는 법령과 행정규칙은 전체를 확실히 공부할 것.
		경찰경비론	[7] 선박교통관제법_중 조 [14] 통합방위법 중 통합방위작전_중 조 [18]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_하 조		
		수색구조론	[4] 수상구조법 중 수난구조 종사명령_중 조		
		안전관리론	[5] 연안사고예방법_중 조 [17] 수상레저안전법_중 조		
		환경관리론	[10] 해양환경관리법 상 조 [16] 방재대책본부 운영 규칙_중 조		
		정보론			
		보안론			
		외사론	[12] 출입국관리법 중 외국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_중 조	[12]	
		수사론	[19] 과학수사 중 시체의 현상_중 [20] 수사의 전개과정 중 범죄정보의 특징_중		

※ 본 해설의 무단 복제, 무단 배포, 무단 게재 등을 모두 금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DAUM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에 판례, 조문, 단문형 매일테스트, 유료 모의고사도 많은 이용바랍니다.

※ 송광호 유료 모의고사의 문제 구성은

본 기출문제의 해설방식과 같이 문제, 정답, 해설, 근거조문, 정리 순으로 구성됩니다.

<http://cafe.daum.net/no1police>

DAUM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

공부와 관련한 자유로운 질문, 교재, 강의, 유료 모의고사 등 문의는 010-8677-9429 (송광호)

2021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시험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해설 : 송 광 호

01. 다음 중 해양경찰 헌장(2021년 1월 1일 시행)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번 ■

- ㉠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국민의 봉사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 '정의의 실현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출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총론 이론서 1.0버전 한국해양경찰사 20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총론 > 한국해양경찰사 20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총론 > 한국해양경찰사 20-1.

난이도 상급

해설 ② "㉠, ㉢" 2개는 옳고, "㉡, ㉣" 2개는 옳지 않음.

㉡ [옳지 않음] '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 [옳지 않음]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조 문 '해양경찰 헌장' (2021년 1월 1일 시행)

해양경찰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치안 확립에 힘쓰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에 굳은 각오로 다음을 실천한다.

1.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1. '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1.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02.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2번 ■

- ㉠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직할단으로 둔다.
 ㉢ 경비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해양경찰청에는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출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2번

출제영역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총론 이론서 > 해양경찰행정조직법 > 05번 테마

사 용 해양경찰학 총론 > 해양경찰행정조직법 > 05번 테마

난이도 총론 기출문제집 > 해양경찰행정조직법 > 05-5.

해 설 중급

② “㉠, ㉡, ㉢” 3개는 옳고, “㉣” 1개는 옳지 않음.

㉠ [옳음]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제1항).

㉡ [옳음]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제3항).

㉢ [옳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경비국) 제3항 제10호

㉣ [옳지 않음]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국·국제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제1항).

조 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2. 25.] [대통령령 제31495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2조(소속기관)

-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제6조(하부조직)

-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국·국제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개정 2021. 1. 14.>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11조(경비국)

-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감독
 3. 동·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진압
 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감독
 6. 해양상황의 처리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7. 해양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8.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9.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
10.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
11.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협력

조 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2. 25.]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 12. 2., 2021. 1. 14., 2021. 2. 25.>
 1. 삭제 <2021. 2. 25.>
 2. 중부·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3.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 ② 기획운영과장·경비과장·구조안전과장·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 2021. 1. 14.>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항공단장·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 ⑤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03. 다음 중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은 모두 몇 개인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3번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해양경비법』
- ㉢ 『수상레저안전법』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 『해양환경관리법』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 『어선안전조업법』

- ① 4개
- ② 5개
- ③ 6개
- ④ 7개

정 답 ②

출 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3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총론 이론서 > 해양경찰행정작용법 > 01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총론 > 해양경찰행정작용법 > 01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총론 > 해양경찰행정작용법 > 01-5.

난이도 중급

해 설 ② “㉠, ㉡, ㉢, ㉥, ㉦” 5개는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임.

해양경찰청이 단독 소관 하는 법률은 ㉠ 『해양경비법』, ㉡ 『해양경찰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6개이다.

04.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대한 내용(제29조, 제39조)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4번 ■

- ①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③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자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④ 구조본부의 장의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는 구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정답 ③

출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4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수색구조론 02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 수색구조론

사용 기출문제집 각론 > 수색구조론 02-29.

난이도 중급

- 해설 ① **〔옳음〕**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1항.
- ② **〔옳음〕** 수난구호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2항.
- ③ **〔옳지 않음〕**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 국가로부터(x))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제1항 본문.
- ④ **〔옳음〕** ㉠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제1항 단서와 각호.

조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구조법)[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511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7. 3. 21.>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05.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5번 ■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 ④ 민간연안순찰요원은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정답 ④

출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5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해양경찰안전관리론 연안사고예방법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 해양경찰안전관리론 > 연안사고예방법 07번 테마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안전관리론 > 연안사고예방법 07-16.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② [옳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③ [옳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제1항

④ [옳지 않음] 민간연안순찰요원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제1항.

조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예방법)[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49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20. 12. 23.] [해양수산부령 제450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연안순찰요원(이하 “민간연안순찰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122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지원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연안순찰요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2017. 7. 26., 2020. 12. 23.>

1. 모자, 근무복, 점퍼 등의 복장
2. 호각, 야광조끼 등의 장비
3. 단체상해보험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 그 밖에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06.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상 연안구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6번 ■

① 연안구조정은 파출소 및 출장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②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상순찰 중인 연안구조정 근무자는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등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 답 ③

출 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6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이론서 >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 범죄의 예방 15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각론 >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 범죄의 예방 15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 범죄의 예방 15-20.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옳음]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연안구조정) 제1항

② **【옳음】**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연안구조정) 제1항.

③ **【옳지 않음】** 연안구조정 근무자는 출·입항 및 해상순찰 근무 시에는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입항 즉시 파출소장에게 보고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연안구조정) 제5항.

④ **【옳음】**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9조(연안구조정 등의 장비관리) 제1항

조 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시행 2019. 12. 30.] [해양경찰청훈령 제163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37조(연안구조정)

① 연안구조정은 파출소 및 출장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②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연안구조정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소속 파출소장이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을 근무자들이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⑤ 연안구조정 근무자는 출·입항 및 해상순찰 근무 시에는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입항 즉시 파출소장에게 보고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제39조(연안구조정 등의 장비관리)

①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등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안구조정 등 관리책임자는 정박 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순찰정 PMS 이행 및 기록관리

2. 계류색, 수밀상태, 기관실 빌지 상태 및 SEA CHEST 밸브 확인 등

3. 워터제트식 추진기의 경우 해상 이물질에 의한 추진기의 흡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이물질 제거

4. 평소 장비설명서(매뉴얼)에 따른 주기별 점검 및 관리

5.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

6.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육 및 도난 예방 등

③ 해양경찰서장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연안구조정 등을 집중보관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집중보관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07.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7번 ■

①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시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2019년에 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답 ①

출 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7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해양경찰 경비론 선박교통관제법

출제영역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 해양경찰 경비론 > 선박교통관제법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 경비론 > 선박교통관제법 33-8.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옳지 않음]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② [옳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1항
 ③ [옳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제1항
 ④ [옳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700호로 제정되었고,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목적)).

조 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약칭: 선박교통관제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08.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8번 ■

- ① 해양경찰관은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이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나포 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경비법』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 답 ④

출 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8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총론 이론서 > 해양경찰행정작용법 > 해양경비법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총론 > 해양경찰행정작용법 > 해양경비법 50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총론 해양경찰행정조직법 02-1.

난이도 중급

해 설 ④ 모두 옳음.

조 문 『해양경찰법』 [시행 2021. 1. 14.] [법률 제17904호, 2021. 1. 13., 일부개정]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0번 ■

- ① 대통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방제의무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정 답 ④

출 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0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이론서 > 해양경찰 해양환경관리론 > 해양환경관리법 02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각론 > 해양경찰 해양환경관리론 > 해양환경관리법 02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 해양환경관리법 02-13.

난이도 중급

- 해 설 ① [옳음] 대통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 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1항).
- ② [옳음] ㉠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방제의무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1항).
- ③ [옳음]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1항
- ④ [옳지 않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제1항).
- 조 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 ① 대통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①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② 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2.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받는 자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관련되는 행위를 한 자
-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1. 기름이 하나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이 경우 기름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3. 군사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한 방제조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
-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 ⑤ 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재단과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11.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28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1번 ■

-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20210228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1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총론 이론서 > 해양경찰행정조직법 09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총론 > 해양경찰행정조직법 09번 테마

사용 기출문제집 총론 > 해양경찰행정조직법 09-가-1.

난이도 하급

해설 ① [옳지 않음]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해양경찰법』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

② [옳음] 『해양경찰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제1항

③ [옳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해양경찰법』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항}.

④ [옳음] 『해양경찰법』 제8조(재의요구) 제1항

조문 『해양경찰법』 [시행 2021. 1. 14.] [법률 제17904호, 2021. 1. 13., 일부개정]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 연히 퇴직된다.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재의요구)
-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0210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2번 ■

㉠ 강제퇴거 ㉡ 고발 ㉢ 보호 ㉣ 입국금지 ㉤ 출국금지
㉥ 출국명령 ㉦ 출국정지 ㉧ 통고처분

-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정답 ③

출 처 20210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2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이론서 > 해양경찰 외사론 04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각론** > **해양경찰 외사론**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 외사론 04-1.

난이도 중급

해 설 ③ “㉠, ㉡, ㉢, ㉣, ㉤” 5개는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 1개는 내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 ㉡” 2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정 리 『출입국관리법』 상의 조치

내국인	출국금지(동법 제4조 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외국인	(1) 입국금지(동법 제11조 제1항) (2) 출국정지(동법 제29조,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3) 강제퇴거(동법 제46조 제1항) (4) 보호조치(동법 제51조 제1항) (5) 출국권고(동법 제67조 제1항) (6) 출국명령(동법 제68조 제1항)
내·외국인	(1) 고발(동법 제101조 제1항), (2) 통고처분(동법 제102조 제1항)

13. 다음 중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20210227 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 13번 ■

- 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 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③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할 것

④ 범인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

정답 ①

출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3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총론 이론서 > 해양경찰행정작용법 > 해양경비법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총론 > 해양경찰행정작용법 > 해양경비법 50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총론 > 해양경찰행정작용법 > 해양경비법 50-48.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음]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2항 제1호

② [옳지 않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해양경비법 시행령』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2항 제2호]

③ [옳지 않음]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최소화할 것[『해양경비법 시행령』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2항 제3호]

④ [옳지 않음]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이 아니다.

조 문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경찰장비: 소화포(消火砲)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최소화할 것

14. 다음은 『통합방위법』 상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작전지휘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4번 ■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 (㉡), (㉢), (㉣)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① ㉠ 통합방위본부장

② ㉡ 지역군사령관

③ ㉢ 지방해양경찰청장

④ ㉣ 시도경찰청장

정답 ③

출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4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이론서 > 해양경찰 경비론 > 통합방위작전 28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 해양경찰 경비론 > 통합방위작전 28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비 경찰활동 > 경찰작전 및 위기관리 28-2.

난이도 중급

해설 ③ [옳지 않음]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합대사령관 또는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제4호].

조 문 『통합방위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68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합대사령관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15.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5번 ■

- ① 순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미만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순찰차 운전요원은 반드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이륜차량 운전요원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
 ④ 순찰차를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출입의 용도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③

출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5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이론서 >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 범죄의 예방 15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각론 >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 범죄의 예방 15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 범죄의 예방 15-21.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지 않음]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6조 (순찰차 등) 제3항 전단).

② [옳지 않음] 순찰차 운전요원은 반드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6조 (순찰차 등) 제3항 후단).

③ [옳음]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6조(순찰차 등) 제3항 후단

④ **[옳지 않음]** 순찰차 등은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출입, 출장소 감독순시 등 파출소 및 출장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6조(순찰차 등) 제4항〕.

조 문 『피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시행 2019. 12. 30.] [해양경찰청훈령 제163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36조(순찰차 등)

- ①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차 및 이륜차량 등을 항상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선풍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순찰차 등의 활동 구역은 담당 파출소 관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치안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찰 권역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③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순찰차 운전요원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이륜차량 운전요원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④ 순찰차 등은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출입, 출장소 감독순시 등 파출소 및 출장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⑤ 그 밖의 순찰차 및 이륜차량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찰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16. 다음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20210227 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 16번 ■

- ㉠ 중앙방제대책본부: 지숙성 기름이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역방제대책본부: 비지숙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숙성 기름이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① 560 ☐ ② 650
☐ ③ 810 ☐ ④ 900

정답 ③

출 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6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이론서 > 해양경찰 해양환경관리론 > 방제대책본부운영규칙 03번 테마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각론 > 해양경찰 해양환경관리론 > 방제대책본부운영규칙 03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 방제대책본부운영규칙 03-3.

난이도 중급

해설 ③ [옳음] $810 = 500 + 300 + 10$

- ㉠ 중앙방제대책본부 : 가. 지속성 기름이 500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제1항 제1호)
- ㉡ 광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kl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300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제1항 제2호)
- ㉢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10kl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100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제1항 제3호)

조 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시행 2020. 12. 14.] [해양경찰청훈령 제203호, 2020. 12. 14., 일부개정]

제5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 ①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출 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고 초기에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사고 상황을 평가하여 광역 또는 중앙방제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방제대책본부
가. 지속성 기름이 500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광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kl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300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10kl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100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청장
2. 광역방제대책본부장: 지방해양경찰청장
3. 지역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서장

③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7.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7번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에 합격한 후 (㉢)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 복원성, ㉡ 중간검사, ㉢ 시장·군수·구청장
- ② ㉠ 복원성, ㉡ 임시검사, ㉢ 해양경찰서장
- ③ ㉠ 부양성, ㉡ 중간검사, ㉢ 해양경찰서장
- ④ ㉠ 부양성, ㉡ 임시검사, ㉢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④

출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7번

출제영역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 수상레저안전법 06번 테마

사 용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 수상레저안전법 06번 테마

난이도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 수상레저안전법 06-57.

해 설 중급

④ [옳음] ㉠ 부양성, ㉡ 임시검사, ㉢ 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제1항.

조 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36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9. 8. 27.]

18. 다음 중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비상근무 등급별 연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8번 ■

- ① 갑호비상 : 연가 중지
- ② 을호비상 : 연가 중지
- ③ 병호비상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 억제
- ④ 해양경계강화 : 제한 규정 없음

정 답 ②

출 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8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이론서 > 해양경비 경찰론 >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각론 > 해양경비 경찰론 >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비 경찰론 >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31-12.

난이도 중급

해 설 ② [옳지 않음] 갑호비상 근무 시 연가를 중지하고, 을호 및 병호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한다(『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6조 (근무요령) 제6항).

조 문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시행 2020. 2. 20.] [해양경찰청훈령 제175호, 2020. 2. 20., 일부개정]

제6조 (근무요령)

-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력을 동원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무기능과 관련기능만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비상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갑호비상 : 가용인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2. 을호비상 : 가용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3. 병호비상 : 가용인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4. 해상경계강화 : 별도의 경력 동원없이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수준의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 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상황을 특성을 고려하여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 동원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1. 갑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2. 을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3. 병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4. 해상경계강화 : 별도의 가용경비세력 동원 없이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수준의 가용경비세력을 동원 할 수 있다.
- ③ 비상대기태세 유지 시 기본 근무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제선상 위치로 근무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지휘감독 철저
 2. 상황 발생 시 보고·지휘체계 확립 및 대응철저
 3.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소집 체계 유지
 4. 안전수칙 준수로 자체사고 예방
 5. 함정·항공기·특공대·구조대 긴급 출동태세 유지
- ④ 해상경계강화를 제외한 비상등급의 근무는 비상근무 목적과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배치 및 교대근무, 대기근무 등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 ⑤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 ⑥ 갑호비상 근무 시 연가를 중지하고, 을호 및 병호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한다.

19. 다음 중 시체의 후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0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9번 ■

- ①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됨에 따라 중력에 의해 적혈구가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혈액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시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한다.
- ② 부패균의 산화작용과 환원작용에 의하여 부패가 발생한다.
- ③ 시체밀랍은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이다.
- ④ 미이라화(mummification)는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이다.

정 답 ①

출 처 20210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19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이론서 > 해양경찰 범죄수사론 > 과학수사 > 시체의 현상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각론 > 해양경찰 범죄수사론 > 과학수사 > 시체의 현상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 범죄수사론 > 과학수사-1.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옳지 않음] 시체의 초기현상 중 시체얼룩이란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됨에 따라 중력에 의해 적혈구가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혈액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시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 리 시체의 초기현상과 후기현상

시체의 초기현상	체온냉각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대기온도와 같아지거나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기온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 ※ 체온은 항문에 검은기를 삽입하여 곧창자 내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함.
	시체건조	시체의 피부에 대한 수분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은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짐. → 피부·입술·항문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의 피혁상화(皮革狀化) 현상임.
	각막의 혼탁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짐.
	시체얼룩	적혈구의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함. ※ 시체얼룩을 통해 사망 당시의 시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시체굳음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근육이 굳어짐. →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이 굳어짐.
시체의 후기현상	자가용해	(1) (부패와는 다른 개념으로 세균의 작용과는 별도로) 사후 ATP의 생성중단으로 체내에 있는 각종 효소가 자가용해에 관하여 각 실질장기나 연조직 등의 단백질분해효소, 지방질분해효소, 탄수화물분해효소 등에 의하여 분해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2) 사후에는 미생물의 관여 없이도 세포 가운데의 자가효소에 의하여 분해가 일어나 세포구성 성분은 분해되어 변성되고 세포 간 결합의 붕괴로 조직은 연화됨.
	부패	(1) 부패균의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현상. (2) 부패의 3대 조건 ① 공기의 유통이 좋음. ② 온도 : 20~30℃ ③ 습도 : 60~66%
	미라화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시체의 후기현상
	시체밀랍	(1)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형태의 지방산 또는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2)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됨.
	백골화	(1) 뼈만 남는 상태 (2) 소아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됨.

20. 범죄정보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20번 ■

- ① 가치변화성은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범죄정보의 특징을 말한다.
- ② 여러 정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정보의 특징을 결합성이라 한다.
- ③ 혼합성이란 범죄정보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 ④ 범죄정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시한성을 말한다.

정 답 ④

출 처 20210227_2020년도 제3차 해경순경공채 해양경찰학개론_20번

송광호의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이론서 > 해양경찰 범죄수사론 > 수사의 전개과정

출제영역 해양경찰학 각론 > 해양경찰 범죄수사론 > 수사의 전개과정 > 수사정보 14번 테마

사 용 기출문제집 각론 > 해양경찰 범죄수사론 > 수사의 전개과정 > 수사정보 14번 테마

난이도 중급

해 설 ④ [옳지 않음] 범죄정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결과지향성을 말한다.
정 리 범죄정보의 특징

시한성	(1) 범죄정보의 효용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특히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시기의 타이밍이 중요함. (2) 범죄정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함.
가치변화성	범죄정보는 선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짐
결합성	범죄정보는 결합되고 가공되어지며 기초정보가 다른 기초정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정보가 되거나 다른 사건정보와 결합하여 범죄정보가 됨
결과지향성	범죄정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사건으로 나타나는 결과(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함.
혼합성	범죄정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고,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됨.

송광호
경찰실무